

“나도 당했어요” 한국판 미투... 응답하라 대한민국

(Me too)

**성폭력 범죄 매년 증가 추세
피해 비율 女가 男 보다 높아
직장 문화개선·성희롱 예방 교육
가해자 강제집행 강화 등 필요**



/오른애즈

검찰발(發)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면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와 교육, 관련 예산 확보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남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9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상급자에게 당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폭로했다. 다음날 또 다른 전직 여검사는 현직 시절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는 등 검찰 내 ‘미투(나도 당했다)’ 바람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 “한국서 성희롱은 별 일 아냐”
체념

직장 내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2016년 A사에서 계약직으로 통역 업무를 했던 B씨는 상사 C씨로부터 1년 내내 성희롱을 당했

다. 유부남인 C씨로부터 몸매 평가와 무리한 데이트 신청에 시달리던 B씨는 회사에 성희롱을 제보했다. 사측은 당사자 조사와 면담 뒤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C씨에 대해 징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약 만료로 퇴사한 B씨는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 별 것 아닌 일로 여기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 범죄는 2만9357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6.8건 발생했다. 2007년 29.1건에서 두 배 가까이 된 수준이다.

여성의 성폭력 피해 비율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2016년 성폭력 피해자 2만9357명 가운데 남성은 1478명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은 2만6116명(미상 1763명)으로 18배 격차를 보였다.

여성이족부의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6년 9월~12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7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21.3%가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1.2%에 머물러 18배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7.2%)의 성희롱 피해 경험 역시 남성(0.8%)의 9배 수준이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여성과 남성이 각각 42.7%와 26.9%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뒤늦은 개정법 시행...“실행력 키우고 교육 강화해야”

이에 현행법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

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에게는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전무다.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조치 등이 담긴 개정법은 5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박사는 “법 제도와 직장 문화를 장기적으로 바꾸면서 문화 개선과 성희롱 예방 교육, 피해자 구제 절차와 가해자 강제집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15개 NGO(비정부기구) 한 곳 당 한 해 2200만원을 지원하는데, 1년치 인건비도 안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어린 시절 성 평등 교육도 강화해야 나중에 가해자로 자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범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 1면 ‘호반, 대우건설 품었다’서 계속

매각 재원,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

산은은 향후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모험자본 형성 촉진, 산업·기업 구조개선 지원 등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수행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 부문장은 “새로운 주인이 대우건설을 잘 경영해 거래 종결 후 2년 뒤 대우건설의 주주가치가 제고된다면 산은도 지분 10.75%에 대한 업사이트 포텐셜(Upside Potential)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중 업무협약(MOU) 이후 주식매매계약(SPA) 등 절차를 통해 올 여름(7월)까지 매각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 2016년 ‘산은 혁신인’ 등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한 뒤, 2017년 상반기 흑자전환 후 7월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주관사는 국내외 188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고, 예비 입찰에 참여한 13개 투자자 중 기준에 부합한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중 유일하게 본입찰에 참여한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수립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이주열 총재 3월 임기 만료... 차기 한은수장은 누구?

통화정책·국제금융 전문가 등 하마평 무성

내달 말 후보 윤곽 나올 듯



(왼쪽부터)장병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은 부총재), 김재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전 한은 부총재보), 이광준 연세대 특임교수(전 한은 부총재보)

최근 올 상반기 한국은행 인사가 소폭 단행된 가운데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이주열 총재 이후 차기 한은 수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최소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2월 말에는 유력 후보군이 추려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차기 한은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살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어 시장에서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1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1급 7명, 2급 14명, 3급 18명, 4급 25명 등 총 64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재가 단행한 마지막 인사로 조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사와 조직정비를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실장급 인사는 공석을 채우는 수준

에 그치는 등 이 총재는 새 조직(기획협력국 내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등) 신설에 따른 국·실장 보임 등을 단행했다.

한은 총재는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총재의 입에 국내 통화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역량이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주요국 금

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어 한은으로선 정책을 펼치기 까다로운 환경이다. 국내적으로도 내수 활성화 및 한국경제 회복세, 가계부채 등을 감안해야 해 마냥 신흥국 처럼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월 3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가 신임 의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한은 수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현재닛 엘런 미 연준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히는 제롬의

장이 연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도 금리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올리는 등 통화정책 역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시장에서 한은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은 출신 인사가 차기 총재 자리에 앉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한은 출신 후보군으로 전직 간부로 재직했던 장병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은 부총재), 김재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전 한은 부총재보), 이광준 연세대 특임교수(전 한은 부총재보)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 총재에는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이 번갈아 맡아온 전례가 있어 이번 차기 총재는 외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제협력 관련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국제금융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한은의 국제사회 입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된다. /이봉준 기자 bj35sea@

한줄 News

산업

▲ 지난해 수입 상용차(트럭과 트럭차 등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볼보트럭코리아가 애프터서비스(AS)망 확충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

▲ 기아자동차가 2월 출시를 앞둔 준중형 세단 ‘올 뉴 K3’에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한다.

▲ KT가 내달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등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금융·마켓·부동산

▲ 올해 보험업계의 인수합병(M&A)이 가시화되고 있다. 잠재적 매물로 꼽히는 보험사들이 잇달아 몸값을 높이면서 금융지주 등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국거래소가 KRX300 지수를 발표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지수 관련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난해 민간 분양 최대 물량인 2만4000여 가구를 공급한 GS건설이 올해 ‘자이(Xi)’ 브랜드 아파트 약 3만 가구를 분양한다.

유통

▲ 편의점이 오는 2월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초콜릿 상품을 선보인다.

▲ 코카콜라음료가 2월부터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8% 인상한다.

여관·골프장도 벤처인증 투자받는다

중기부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기존 벤처 생태계, 官→民 전환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 개선

여관이나 골프장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보증(기술보증기금)이나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받는 것만으로 가능했던 벤처인증이 앞으로 없어진다. 대신 사내에 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창작전담부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확인 요건에서 ‘신기술 성장’ 유형도 새로 생긴다. <관련기사 4면>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		
	현행	개선
벤처확인제도 주체	공공기관 중심(기보중진공 등)	민간 전문가 중심(벤처확인위원회 신설)
벤처확인제도 유형별 요건	8천만원 이상 보증대출 금액 등의 요건	보증대출 유형 폐지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
벤처진입규제 철폐	벤처투자 유형 13개 기관투자자	6개 투자자 유형 추가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엔젤매칭 개인투자자 등
핀드 규제	창업법, 벤처법 이원화	일원화→벤처투자촉진법 최소규제로 핀드운용 자율성 강화
모태펀드 운용방식	정부 출자 설정 후 민간자금 모집	민간재원펀드 도입, 정부가 후원 시장실매매 영역에 모태자본공급

증권사나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은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행산업,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만 빼고 대부분 업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벤처 정책을 ‘관’에서 ‘민’으로 전환하고 벤

처 생태계 전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홍준호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삼동 마루180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우리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지만 공급위주의 정부 주도형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자생력과 활력 넘치는 벤처생태계를 위한 첫 걸음으로 벤처확인, 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이후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입지, 규제 및 관행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입체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